

데스크 시각

혁신도시 정신을 되새기자



장 필수
정치부장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하는, 이른바 혁신도시를 당초 광역 시·도별로 한 곳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5년 6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을 확정하자 한 달만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5개월 뒤에는 혁신도시 입지로 나주를 정하고 이듬해 광주·전남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는 '빛가람'으로 정했다. 당시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민들은 왜 전남에 주느냐는 것이었고, 전남도민들은 나주에 두면 손해는 결국 광주가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불만에도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현재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 등 16개

광주·전남 윈윈 통해 상생

빛가람혁신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전남의 상생 행정은 민선 5기 시절인 지난 4년간 압축기였다. 손백도 마주쳐야 나뉠 시장과 지사 간 불협화음으로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촉진할 만한 광역행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광주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두고 엇박자를 냈고 표판 의식에 상대방 의견도 묻지 않고 군부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가 불신만 초래했다.

호남으로 폭을 더 넓혀 보면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가까워지기보다는 서로 멀리하는 시기를 보냈다. 민선 5기와 시기가 겹치는 이명박 정부시절, 광주·전남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전북이 '탈호남'을 선언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

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편가르기'가 한 몫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남권에 두 개를 주고 호남에는 하나만 주는 '5+2 광역경제권'이란 정책으로 호남을 차별하더니 전남이 먼저 추진한 J프로젝트(지금음 '솔라시도'로 이름이 바뀌었다)와 똑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전북 새만금에 줌으로써 호남마저 전북과 광주·전남으로 편가르는 정책을 폈다.

2006년으로 기억한다. 대권을 꿈꾸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 시내 구정장을 대거 데리고 광주 무등파크호텔을 찾았다. 명목상으로는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서울 구정장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특산품을 서울에서 판매해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대권을 염두에 둔 호남 구매였다.

이제 호남 공동발전 필 때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남정책에서 보았듯이 상생 광역행정의 성패는 정치인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상생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상생을 위해 한목

소리를 내더니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영산강 복원 추진 등 15개 상생안이 그것이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17일에는 첫 실무위원회도 연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상생 행보에 미온적이었던 전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19일 인천아시아인게임 개막에 앞서 호남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에 전북지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호남 시·도지사 3명만 따로 자리를 갖는 것은 5년만의 일이다. 첫 술에 배부름이 없었지만 자주 만나다보면 어떤 형태론든 성과는 있는 법이다.

요즘 '수충권(首忠圈)'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지방을 대표하는 단어로 '영호남'이라 부르던 것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영충호'로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부터 호남 인구가 충청도에도 추월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 회동을 통해 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이 혁신도시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상생은 조금씩 양보하는 데서 나온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전라도 사람들이 어쨌단 말인가?

위를 오히려 배신행위로 변질시키면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세력들에 대한 집적적 보복을 단행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서 굳이 김용철 변호사, 권은희 회장 등을 변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민주화에 헌신한 전라도 출신들을 거론할 경우 수 백 명, 수천 명을 거론해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여기서는 경상도 출신 보수적 정치인을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들, 그래서 보수진영에 의해 의리의 인물들로 회자된 몇 사람을 거론해 볼까 한다. 예를 들어 장세동은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장을 지냈고, 그의 주군 전두환이 잘 나갈 때나 나라에 떨어졌을 때나 한결 같이 그 결을 지켰다고 해서 의리의 사나이로 대명사로 불려졌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세동의 고향은 고흥이다. 김덕룡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의 주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항상 운명을 함께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젠가 김덕룡을 소개할 때 '이 시대의 의인 한 사람을 말하러면 자신은 서슴없이 김덕룡을 택하겠다'고 말할 만큼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였다. 김덕룡의 고향은 전북 익산이다. 지난 7.30 보궐 선거의 주인공 이정현은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박근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고향은 곡성이다. 특정 지역을 의리와 배신이라는 용어로 이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지를 잘 시사해 주는 사례들이다.

화제를 1700만 관객을 돌파하여 우리나라 영화사의 신기록을 장식한 '명량'으로 돌려보냈다. '명량'이 흥행한 근본적 배경은 이순신 장군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의 위대한 리더십 때문이다. 이순신의 출신지는 서울이고 외가는 충남 아산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서울이나 아산이 아닌 전라도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순신은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기 까지 15년의 관직생활 동안 승진과 좌천, 강등, 백의종군 등을 반복하며 험난한 관직생활을 보냈다. 그는 수군절도사로 부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명의 중견간부에 불과했다. 또 하나 이순신은 15년 관직생활 대부분을 육지에서 보냈다. 그가 수군에 근무한 것은 발표 후 한 달로 근무한 10개월이 전부였다. 임진왜란은 그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지 14개월 후에 발발했다. 임진왜란을 맞이할 때까지 그가 수군에 복무한 것은 만호시절까지 모두 합하여 만 2년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임진왜란 때 세계 해전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전쟁에 사전 대비하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발탁,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 그의 뛰어난 리더십이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을 100% 발휘하게 하고 그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들은 바로 무명의 수군들을 포함한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호남인들이 그의 인물됨을 알아봤고, 그 결과 이순신과 호남인들이 운명적 결합을 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 이순신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약무호남, 시무이순신(若無湖南是無李舜臣)'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극우세력들이나 지역분열주의자들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는지, 보았다면 이순신과 전라도의 운명적 결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 궁금하다.

호남인은 임진왜란과 한말 등 국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았다. 극우세력이나 지역분열주의자들이 호남인들의 이런 역사적 역할을 폄하하고 방해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호남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정교로운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호남인은 임진왜란과 한말 등 국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았다. 극우세력이나 지역분열주의자들이 호남인들의 이런 역사적 역할을 폄하하고 방해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호남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정교로운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기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려면

적인 선두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주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반영했다. 7월 4일, (사)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사업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노인 일자리 정책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철은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역사회 맞춤형 비즈니스의 활성화, 노인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노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지원이 있다면 저출산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광주시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맞벌이 부부·조손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10만원~25만원

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양쪽의 거주지가 멀 경우, 이동상의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공공 교육 없이 하루 종일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이의 교육이나 어르신의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할 때인 2009년에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정) '가정 복지도우미 제도'를 생각해 본다. '가정 복지 도우미제도'는 기업이나 자치단체의 지원하에 일자리를 원하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시간 외에 일정 시간 동안(하루 2~4시간) 이웃의 아이들을 이웃의 어르신들이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일정 소득(월 20~40만원)을 보정해 드리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 원칙'에 따라 수요자의 부담을 달리 책정하여 자부담 시키고, 지자체나 기업 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젊은 여성들과 일자리를 찾는 55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내실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당시 언론과 뜻있는 여성들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제도 자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범 실시도 못해봤던 이 조례안이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모태가 되었고, 훗날 국가 정책으로 고려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뒷날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감회도 새롭게 필자가 10년 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생각해 왔던 정책이 시대적 필요에 의해 전반적으로 검토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고 생산적인 대응책을 고심하여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만 삶을 가능하게 할 필수조건이다.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

21세기 '여성 시대'와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이 절실해지고 이에 대한 각급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19회 여성주간'에 광주의 여성계가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7월 2일,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한 '젠더 포럼, 광주여성의 미래를 말하다'는 '광주 여성정책 10대 아젠다 선정'을 위한 자리로 제시된 아젠다 중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 여성 일자리 정책'이 36%의 호응으로 압도

社說

새정치연합 '자중지란' 호남은 착잡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갈수록 태산이다.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당내에서 거부당한 데 이어 외부 비대위원장 선임마저 물거품이 되면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설과 함께 분당에 따른 정계개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30석의 제1 야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뒷발인 호남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감에 젖어 있다. 지리멸렬한 새정치연합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제1 야당의 자격이 있는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박영선 위원장에게 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두 차례나 좌초되고, 비대위원장 영입이 거부되면서 리더십은 물론 당에 치명상을 입혔다. 당을 이끌고 혁신을 추동할 동력도 상실했다. 새정치연합의 분란 원인은 고질적인

계파갈등에서 찾아야 한다. 수습방안으로 혁신과 개혁을 위한 비전이나 일정 제시 없이 오로지 관리형 비대위원장 영입 이야기만 무성한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비대위원장 영입을 놓고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를 비롯해 당내 중진들이 개파적 이해와 차기 당권 득실을 계산하며 보여준 태도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 후 꾸린 비상대책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어디에까지 다다를 것인지 가늠조차 안 된다. 설사 내분이 수습된다 해도 당권을 둘러싼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어 당의 정서함은 미지수다. 야당의 위기는 식물공회를 낳고, 국정 위기와도 직결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당 중진들이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계파 이기주의를 접고, 당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내홍에 휩싸인다면 호남 민심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호남 광역단체장 회동, 상생에 초점 뒤야

광주와 전남·전북 3개 시장·지사가 호남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얼굴을 맞댄다. 광역단체장들은 오는 19일 인천 아시아인게임 개막식 때 공동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모임에 해당 시·도는 일단 민선 6기의 상경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광주·전남부터 불기 시작한 상생 기류 속에 전북지사까지 회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잘만하면 '소외'의 굴레에 갇혀있는 호남권이 비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시·도지사가 만나면 권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크다. 공동 해결 과제로 떠오른 KTX 호남선 완전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 광주 문화전당~전주 한옥마을~여수 세계박람회장 등을 연계하는 공동 관광벨트 구축 방안이 주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 J 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개발 상생 방

안, 광주·무안·군산공항 운영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전남·북은 고래로 호남이라는 큰 틀에서 상생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해관계에 얽혀 인식을 달리하거나 편 가르기로 인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자세로 타지역과의 조화로움 발전을 모색해야지, 배타적 고립을 초래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먼저 전북이 광주·전남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부터 털어내야 한다. 새만금-J프로젝트, 무안국제공항-군산공항 운영 문제 등을 경쟁이 아닌 상생에 중점을 둔다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북 간 결렬들도 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 하나씩 허물아가야 한다. 호남이 금이 간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해와 대화를 통해 공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과학과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마법이야말로 인간의 꿈과 희망을 이뤄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기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종교와 예언자들은 초자연적이거나 반자연적인 기적과 주술에 의지하게 됐다. 철학자 폴 카러스(Paul Carus)는 자신의 저서 '만들어진 악마'에서 '과거의 기성종교는 예언자나 성인들을 내세워 기적을 행하고, 기적과 주술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종교들은 주술사나 마법사가 전면에 나서는데 이들의 행위를 주술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적과 주술은 둘 다 자연의 법칙들을 바꾼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기성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시범 실시도 못해봤던 이 조레안이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모태가 되었고, 훗날 국가 정책으로 고려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뒷날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감회도 새롭게 필자가 10년 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생각해 왔던 정책이 시대적 필요에 의해 전반적으로 검토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고 생산적인 대응책을 고심하여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만 삶을 가능하게 할 필수조건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지난 수세기에 걸쳐 행해진 매우 많은 비열한 행위들이 기적으로 간주된 반면 또 다른 훌륭한 많은 행위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술이라는 낙인이 찍혀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성종교 성직자들은 다른 종교의 '기적'을 마력과 주문의 힘이라며 비난해 왔다. 결국 초자연적, 반자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은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신의 기적' 또는 '악마의 주술'이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온 셈이다. 똑같은 행위지만 내가 하면 기적이요, 남이 하면 주술이라는 얘기가. 웬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던 정부·여당이 최근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감절토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비난했던 자신과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약속을 어긴 증세는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로맨스겠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이 보기에 불륜일 뿐이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005)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건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